

국회로 번진 '게임질병' 논란... 여야 '신의 한수' 찾을까

여론 54% 찬성, 41% 반대 '팽팽' 교육·복지부 '환영', 문체부 '난감' 與, 상임위 의견 모아 조율하기로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정치권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바른미래당 내 정책 연구기관 바른미래연구원(홍경준 원장)이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중독 질병분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543명)가 찬성을, 40.6%(411명)는 반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50대(61.4%), 여성(59.4%), 주부(57.5%), 진보성향(60.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대 비율은 게임 이용률이 높은 20대(52.3%)에서만 유일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원·육성할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61.0%가 '동의한다'고 했지만, 33.8%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게임중독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문제는 반대(57.3%)가 찬성(38.1%)보다 많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5일 총회에서 게임 이용장애(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했다. 이 권고의 효력은 2022년부터,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법 등을 정비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중독 질병분류에 대한 정

부 부처별 입장은 엇갈린다.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이용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난해한 상황을 맞았다. 보수권도 WHO 결정을 환영하는 쪽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WHO 결정을 환영한다"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 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모으는 계획이다. WHO 권고사항이 발효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의견을 모아 조율한다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각 소관 상임위에서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측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 '격동하는 게임시장, 봄날은 오는가' 토론회에서 게임업계를 향해 "이제 형님들이 말할 때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촉구했다. 게임업계 출신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나도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비슷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모란 돌이 정 맞다고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던 게 사실"이라고 회회했다. 그러면서 "게임업계를 공격하는 쪽이 있으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곳도 필요하다"며 "많은 분이 현업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서 더 올린다

기재부, 하반기 정책방향 통해 발표 면세한도 600달러서 추가 상향검토



지난달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에서 여행객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ml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

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할 바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1보루까지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면서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비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6개월간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12월께 전국 공항이나 항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석대성 기자

해수부, 여객선 안전강화 내년 유아용구명조끼 비치

형거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사고 당시 승객에게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에서는 내년부터 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구명설비기준'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객선에는 성인·어린이용 구명조끼만 있어 유아의 경우 구명조끼가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빅데이터' 자격증 신설 노동부, 분석기사 등 5개

고용노동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 등 일부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비롯해 '서비스·경험 디자인 기사', '정밀 화학 기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사', '신발산업 기사' 등 모두 5개다.

이들 자격의 취득은 검정 위탁기관 선정과 시험 출제 기준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해진다.

노동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와 서비스·경험 디자인 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철도도목산업 기사', '연삭 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된다. 다만, 기존 자격의 효력은 유지된다. /석대성 기자

SNS·인방 등... 지지층 확보 열 올리는 잠룡들

팬덤확보 전략

홍준표·유시민, 유튜브 자유토론 이낙연·박원순, 정책연구 등 추진

20대 국회가 올해 들어 사실상 잠든 국면에 빠지자 여야 대선 잠룡이 곳곳에서 지지층을 키우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강연, 책 발간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지지층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메트로신문은 4일 20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부상한 여야 정치인사의 행보를 분석했다.

'팬덤(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인터넷 방송' 활동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3일 동영

상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자유 토론을 펼쳤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을 별도의 원고 없이 진행했다. 차기 유력 대선주자이자 보수-진보진영의 대표 논객인 두 사람의 끝장 토론은 4일 오전 기준 100만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을 사로잡았다. 여권 대표 대권주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장과 정책 연구·추진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2위인 이 총리는 1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총리는 4선 중진이자 전남도지사까지 지낸 정치 전문가로서 최근 발생한 강원도 대형산불 지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주력하고 있다.

박 시장의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만 3선째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달 29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간편 전자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홍보에 나섰다. 정책 알리기와 더불어 정책 추진·실행을 위해 여당 지도부 등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언론과의 스킨십으로 다시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 참석 후 국회 언론인 간담회·만찬을 추진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홍 전 대표 외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등이 대선주자로 꼽힌다. 제1야당 원외 수장인 황 대표를 제외한 이들은 주로 강연 정치에 집중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미국 체류를 마친 후 4일 모교인 영남대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교수 출신인 김 전 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홍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토론을 보기 위해 7400여명이 대기 중이다. /유튜브 TV홍카콜라 캡처

원장은 한국에 머물면서 강연과 책 출간 등에 집중하며 정치권 복귀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 유 전 대표는 강연 정치의 1인자로 꼽힌다. 유 전 대표는 지난 3일 대구 경북대 강연을 포함해 올해 들어 대학 강연만 5번 이상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는 앞서 19대 대선을 앞두고 연구교수로 재직했던 한림대에서 강연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